

광주·전남 초대 통합교육감 누구...발걸음 빨라진 입지자들

현직 공청회 등 통합대응 껌걸음 도전자들, 시민 후보 단일화 집중 선거구 2배 확대·자금 등 관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초대 통합교육감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양 지역 현직 교육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서며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와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출마 예정자들 역시 현직의 재선 도전에 맞서 후보 단일화에 집중하고 있

다. 통합교육감 선출시 선거구가 2배로 확대되는 만큼 지지 기반과 조직력, 선거 자금 확보 여부 등이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통합교육감 선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온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특별법안 발의 이후에도 '교육통합 도민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통합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오는 6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리는 통합 공청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청 2층 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미래교육이 마주하

는 벽, 입시'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 교육감은 또 전남부터 이틀 간 함평·나주·화순·고흥·순천·강진에서 6차례 도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 통합교육감 선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최근 들어 적극적인 통합 행보로 선화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을 6월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속도조절론을 제기해 왔지만, 지난달 30일 특별법안 발의 이후 발표한 입장을 통해 "좌고우면하지않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오는 5일 영광군청에서 열리는 '행정통합 공청

회'에 참석해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 또한 각기 다른 전략으로 인지도와 지지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 후보 단일화 역시 통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후보 단일화 통합 방식과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정될 경우 선거구 광역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고 선거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후보간 연대나 단일화 등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양 지역의 교육 현안을 반영

한 선거 전략을 새로 수정해야하는 탓에 선거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남의 한 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는 "통합교육감 선출 확정시 선거구가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양 지역 후보자들 모두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향점이 같으니 민주진보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한 출마예정자도 "후보 단일화 통합에 동의한다"며 "각 지역 공천위에서 선출된 광주와 전남 각 후보를 중심으로 통합 단일화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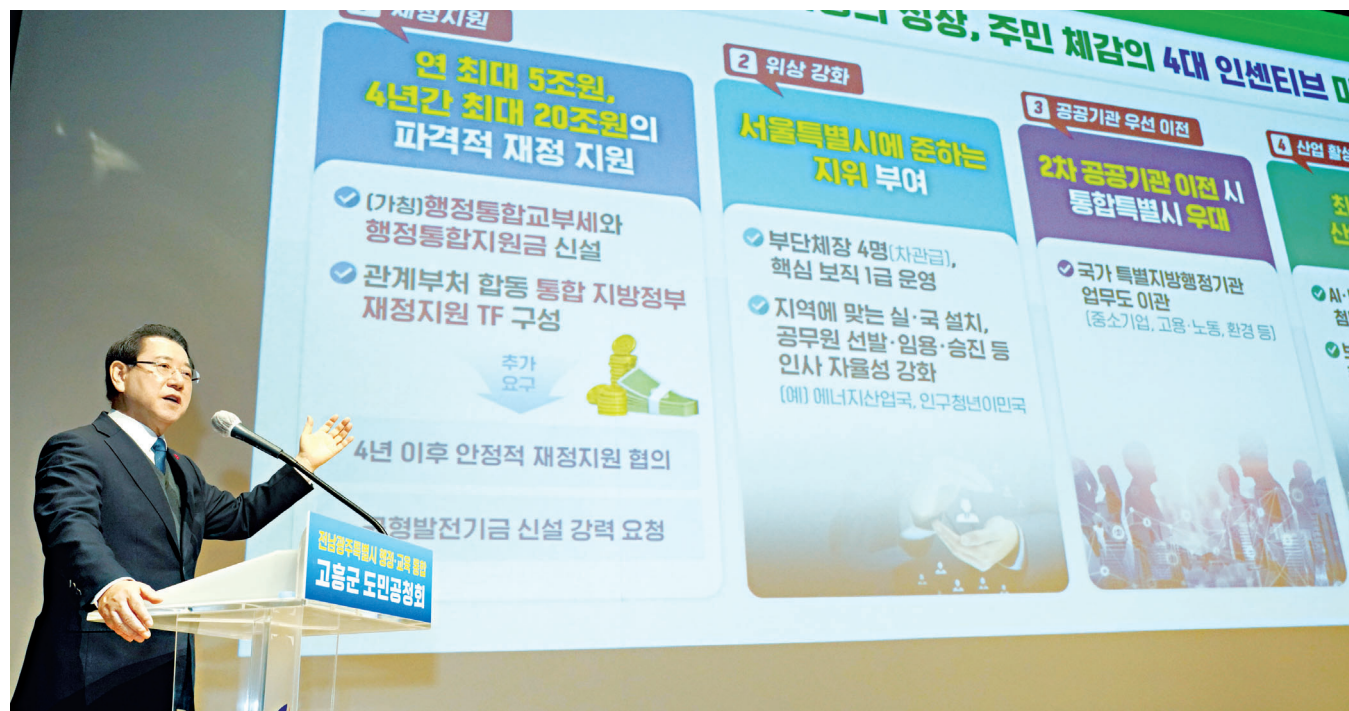
다만, 양 지역의 시민공천위원회가

후보 단일화 통합을 놓고 온도차를 보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민공천위 관계자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선거공학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오히려 시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후보 단일화 통합을 논의하기 보다는 각 후보들의 교육 정책과 행정을 알리는데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공천위는 오는 7-10일 여론 조사와 전자투표를 한 후 11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전남공천위원회는 5일까지 명부 확인 기간을 거쳐 최종 경선단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고흥군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 "전남 동부권 산단에 AI·반도체 등 유치"

동부 소외론에 서운함도 토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전남 동부권 산단을 RE100으로 조성하면서 AI·반도체·이차전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순회공청회에서 "동부권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석유화학, 철강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순천·광양 일원에 준비 중인 미래첨단전략국가산단을 이번 정부에서는 무조건 지정해 줄 것

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통합 특별법안에 의과대학 신설이 제외된 배경에 대한 질의에는 "아마도 원내 행정실에서 급하게 처리하고 우리 측이랑 상의 없이 제출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며 "법안보다 실제 추진 여부도 중요하네 전남의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동부권 소외론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탄다"며 "동부청사를 만든 게 누군지 모르잖나"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예산쿼터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예산 배정 등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시·도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근산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 jndnnews@naver.com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대·우려 교차"... 시도 행정통합 공청회 마무리

재정지원·개발 인프라 등 긍정 도시쇠퇴·농어촌 소외 목소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공청회가 3일 마무리됐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19일 동구를 시작으로 5개 구 공청회가 진행됐고, 전남에서도 이날 화순·순천·강진을 마지막으로 22개 시군에서 행사가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 강수현씨(서구 금호2동)는 "행정통합으로 인구 140만명의 호남 대표

도시가 사라지는 것은 그동안 광주가 만들어 온 도시와 역사, 이미지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광주시를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특별법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현씨(북구 양산동)는 "학부모 입장에서 광주와 전남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걱정된다"며 "학군 등은 그대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지역의 수많은 학교와 교육행정을 한 사람이 총괄하는 것이 가능하겠나"고 우려했다.

전남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농어촌 소외와 도시 쇠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승진씨(장성군 장성읍)는 "행정통합이 되면 일자리와 의료, 교육 등에서 우위가 있는 광주가 더 비대해 질 것이다"며 "140만명의 인구를 가진 광주가

전남의 청년과 산업 등을 흡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태종씨(영암군 삼호읍)는 "순천시와 통합된 승주는 소멸위험지역임에도 농어촌 혜택을 받지 못해 인구가 1만 2,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 들었다"면서 "소규모 지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법에 농촌예산 배정 등을 명시해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행정통합은 속도만큼 주민의 공감과 동의가 중요한 사안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행정통합 찾아가는 탄우홀 미팅을 개최한다. **황애란 기자**

전경선 도의원 "국립의대 빠진 통합특별법 맹탕"

도민 35년 숙원 사업 외면 지속가능 재원 확보도 미흡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빠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맹탕 법안'이라는 강한 질타가 나왔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남 열린 전남도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당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합 논의에서 전제됐던 국제 일부 이양,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5년 숙원 사업이자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인데, 법안에서 빠졌음에도 의회에는 단 한차례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다른 권역의 통합 특별법과 달리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재정자립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주민 투표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의회에는 통합의 실질적 득과 실, 빠진 조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설명 없이 속도전으로 가는 통합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절차적 부족은 결국 통합의 실질적 내용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특례, 국립의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실익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지 못한다면 통합은 정치적 성과나 형식적 절차로 소비되고 도민 설득력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블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동작높은 광우 최고 수준의 5PAR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뷔페사실

2F_SCREEN GOLF
동작높은 광우 최고 수준의 5PAR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뷔페사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B1F_BOWLING
고급스틸고 프레임면 24레인 규준의 대형 bowling

Floor Plan

- 2 - 3F Screen Golf
- 1F Fun it, us Cafe & Lounge
-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원빈리하로 192(서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배달동